

#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23일 착공

[강릉]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 도시인 강릉에서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4개 노선 중 하나인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이달 중 착공된다.

보상비 등 78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는 강릉시 교동 강릉생활체육센터-포남동 모안이골을 잇는 총연장 1.39km

빙상경기장 지구 외곽 연결 총연장 1.39km의 2차선 도로

나머지 3개 공사도 올해 시작의 2차선 도로로 강릉 빙상경기장 지구 외곽을 연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실시 설계를 마치고 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이 진행 중이다. 또 15일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오는 23일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올림픽파크 진입도로가 고지대에 위치해 올림픽 파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아 도로를 미관을 고려한 경관 도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까지 1.92km 4차로 확장 △강릉역~빙상경기장 0.94km 4차선 신설 △올림픽 선수촌(군정교)~경기장 2.2km 4차로 확장 및 신설 등 나머지

3개 빙상경기장 접근도로 공사의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홍구 시 도시환경정비담당장은 “국비 등 7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개 경기장 접근도로 건설 공사는 동계올림픽 개최시 원활한 수송과 교통량 분산은 물론 대회 개최 후 강릉의 동서남북을 원활히 연결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달순기자 dsjo@kwnews.co.kr

## “춘천~속초 철도, 동북아시대 핵심 교통망”

최문순 지사 유일호 장관 만나 현안사업 조기 추진 요청

최문순 지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춘천-속초 및 여주-원주 철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최 지사는 “춘천-속초 철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시대 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고 여주-원주 철도는 서울 강남권에서 원주-강릉 철도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라며 이 두 사업의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춘천-속

초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최 지사는 또 삼척-제진(고성) 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남북협력 사업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조기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지사는 제천-삼척, 속초-간성 고속도로사업의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반영도 요청했다. 유일호 장관은 도 현안 SOC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충남 건강대를 방문해 철원 세계평화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교류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규호기자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나도 스피릿을 살린다’ 서포터즈 모집

- <http://www.2018smile.kr>
- 강릉시 동계올림픽지원단

☎ 033/640-5561 / 010-8992-2018

 춘천관광  2018 스피릿 캠페인  
범시민 실천협의회

## “공사 밀어줄게” 수억원 챙기고 공짜 숙소 생활

태백 상수도 교체 시공사 직원 하청업체로부터 2억8천만원 받아 공사감독관들은 숙소 난방비까지 받아... 상납 먹이사슬 24명 입건

속보=태백시 노후 상수도관망 교체 사업의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감리단 간의 금품 상납 의혹(본보 1월30일·3월 27일자 5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태백시 노후 상수도 관망 교체 공사를 시공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H시공업체 과장

최모(4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업체 직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모(38)씨 등 하청업체 대표 4명과 시공업체로부터 숙소와 난방비 대납 등의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씨 등 한국환경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 시공업체측은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현장 경비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상납받고 살수차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본사에 1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한국환경공단 소속 공무원 신분인 공사감독관들은 3,600만원 상당의 가설 숙소를 제공받고 시공업체가 난방비 등을 대납하는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 “춘천~속초·여주~원주철 조속 추진을”

최문순 지사, 국토부장관 면담서 건의  
“에타발표 지연… 상반기 반드시 통과”

최문순 지사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최 지사는 14일 유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내 주요 현안사업인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사업, 제천~삼척~속초~간성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춘천~속초 및 여주~원주 철도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또 삼척~제진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남북협력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천~삼척속초~간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 지사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장관은 “강원도의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강원도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 태백 상수도관 교체공사 ‘복마전’

속보=650억여원을 쏟아부은 태백시의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유수율이 31%에 그치는 등 부실시공 의혹(본지 3월 27일자 14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맡은 원·하청 업체간 뇌물 상납이 공사 초기부터 5년째 지속돼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12면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태백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금품 상납을 요구한 대기업 H시 공업체 과장 최 모(4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시공업체 직원 10명(배임수재)과 뇌물을 공여해 수수한 공사감독관 9명(뇌물수수), 하청업체 대표 4명(배임증

경찰 ‘뇌물 고리’ 적발...1명 영장·23명 입건

5년째 하청 대표들, 시공사 직원에 ‘뇌물’  
공사감독관은 시공사서 가설숙소 등 편의

제)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뒷돈’ 거래는 공사 착공연도인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하청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현장 경비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 상당을 상납받고 살수차 운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본사에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4억7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기성금의 3%와 일부 공사대금을 요구해 받아 챙기고, 하청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 1년여간 일주일에 2~3회 가량에 걸쳐 5900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서 파견된 김 모(54)씨 등 공사감독관 9명은 공사진행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 신분에도 해당하지만 시공업체로부터 3600

만원 상당의 가설숙소를 제공받는 등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 모(38)씨 등 하청업체 대표 4명은 최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태백 등 모두 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들은 “원청업체가 (뇌물을)요구할 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백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은 태백시가 2015년 완공 예정으로 국비 보조금 등 653억여원을 들여 상수도 유수율을 28%(2010년 당시)에서 87%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진행 5년이 지난 현재 유수율은 31%에 불과하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 【 2015.04.15(수) 건설경제 】

## 국가공기업 인천지역 발주공사

# '지역사 공동도급 49%·하도급 60% 이상' 추진

인천지역에서 국가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49% 이상, 하도급은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 14일 시청 영성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가공기업, 국회의원 및 건설관련 협회 등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 市·국회의원·건설관련 협회 등 지역건설 활성화 상생 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국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 49% 이상, 하도급은 60% 이상 되도록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권장했다. 또 지역 인력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가 공사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역 내에서 국가공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국환 경제부시장, 이학재 국회의원과 국가공기업 7개 기관의 임원을 비

롯해 인천지역 건설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와 국가공기업 관계자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천 건설관련 협회에서도 우수 지역업체 발굴과 추천 등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정홍식 변호사의 하자소송 짚어보기

### 조경에 대하여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나

1. 조경관련 하자 제척기간에 대한 현재 실무법원 입장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71조 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령상으로 보증기간 2년인 조경하자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축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2. 부합과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합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회경제상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취득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고 부합이 일어났다고 하여 반드시 두 물건이 동일한 법률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합의 법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바, 법률상 1개의 물건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부분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교체나 분리 등이 가능하다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 수목의 경우에도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경 수목 자체의 성상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경 수목은 일반 물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부합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  
가사 부합하는 개별 물건의 성질에 따라 별개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합물을 하나의 전체로 보아 동일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조경 수목의 경우에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목의 과실은 지반인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일부분이며,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거나 식재된 입목 등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부합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하나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조경 수목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민법 제6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인 5년 또는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1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법무법인 확인)

# '국가계약' 민간위원 비리도 공무원 수준으로 엄벌한다

기재부, 7월부터 시행

앞으로 국가계약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국가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과정 전반에 걸쳐 사전심사와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사·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뇌물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받는 민간업자는 형사처벌

에 대해 추후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국가계약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 처사, 알선수뢰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 관련 죄명을 민간위원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갖고 있는 데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법률상 미비했다고 판단돼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긴급입찰 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경남기자 knp@